Ⅱ. 보험상품 및 수요

1. 생명보험시장

〈국정과제 46 :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〉

■ 국민행복연금 도입

- (추진계획)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.

표 Ⅱ-1 국민행복연금 도입방안

<table>
<tr><td>국민연금</td><td colspan="4">현행 유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기초연금</td><td>대상자</td><td colspan="3">65세 이상 노인 전체
(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연금액</td><td rowspan="2">소득하위
70%</td><td>무연금자 20만 원</td><td rowspan="4">부부가구는
기초연금에서
각각 20% 감액</td></tr>
<tr><td>국민연금 수급자
14~20만 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득상위
30%</td><td>무연금자
약4만 원</td></tr>
<tr><td>국민연금 수급자
4~10만 원</td></tr>
<tr><td>시행시기</td><td colspan="3">2014년 7월</td></tr>
</table>

자료: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(2013. 2).

-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(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수직역은 제외)를 대상으로 하되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에서 20% 감액
-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며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노인은 최대 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상위 30%인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4만 원 수령
- 정부 출범 즉시 「국민행복연금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

● (대선공약과의 비교) 다른 조건 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행 94,000원의 노령연금을 2배 수준 인상하려던 대선공약에서 재원 조달과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수정됨.

● (영향)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 중 소득이 상위 30% 구간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기초연금이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사적연금보험의 가입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소득이 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적연금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사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2. 손해보험시장

〈국정과제 60 : 농어가 소득 증대〉

■ 농림어업 재해지원을 위한 보험·지원제도 전면 개편

● (추진계획) 재해대상 품목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% 이상으로 확대하고, 보장범위 및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

- 사과·배·단감·떫은 감·감귤은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
-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

● (영향) 정부의 지원 확대로 보험시장 규모도 약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의 하향으로 다소 나아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익성 확보 여부는 의문임.

〈국정과제 94 :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[1)]〉

■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

● (추진계획)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피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, 원인자 미상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2013~2014년 중 법제화

● (영향)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손해보험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, 시장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1) 국정과제 94는 국정목표 4(안전과 통합의 사회) 중 추진전략 15(재난·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)의 내용 중 하나임.

3. 제3보험시장

〈국정과제 47 :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〉

가. 건강보험

■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화

- (추진계획) 4대 중증질환[2]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여 현재 75%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%로 확대
  -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대책 수립
  -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대선공약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전액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려 했으나 재원 문제로 수정
- (영향) 국민건강보험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로 민영건강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고, 따라서 지급보험금의 감소와 민영건강보험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.
  - 단, 보장범위가 넓고 소액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률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오히려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가입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.
  - 또한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은 동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, 소득상실리스크도 보장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
2) 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성질환

■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

- (추진계획) 2016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
  - 2014년 75세, 2015년 70세, 2016년 65세로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
  -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65세로 동일하게 하향 조정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대선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어금니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,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하여 부위별로 확대 적용
- (영향)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담보하면 민영건강보험의 치아보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.

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

- (추진계획)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3등급(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)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등급으로 세분화
  -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높여 조정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대선공약에서는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 원,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, 250만 원, 300만 원, 350만 원, 400만 원, 450만 원, 500만 원으로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단계로 설정
- (영향)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유인이 낮아지고, 이미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음.

- 민영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금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험금지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나. 간병보험

■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

- (추진계획)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및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장기요양등급에 4~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에 우선 편입
- (영향) 공적간병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3등급까지 간병급여를 지원해 왔으나,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국가가 보장을 확대하면 민영간병보험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독거노인 돌봄 강화

- (추진계획)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, 老老케어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동원을 통해 독거노인 돌봄 부담 해소
- (대선공약과의 비교)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부여부를 판정할 때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,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대상 확대
  -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

- (영향) 이들 계층은 민영간병보험의 가입 여력이 미약하며 실제 보험가입자도 적어 보험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.

〈국정과제 48 :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〉

■ 노인의료체계 확충

- (추진계획) 회복병원 체계 강화, '의료+요양+생활 통합서비스' 활성화,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 확충
- (영향) 공공부문의 노인복지 및 노인건강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정액형 장기간병보험 수요는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경우에만 영향을 받음.
  - 그러나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성이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장기적으로 공적체계의 신장은 민간영역을 구축(crowd-out)하는 효과를 부름.